

미국, 국가에너지 전략 중간보고서 발표

미에너지성은 최근 국가에너지 전략수립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에너지성의 정책기본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작년 8월이후 국가에너지 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를 요약한 중간보고서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4~5월에 정책방안의 검토, 6~8월에 중간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전수령, 9~10월 정책대안에 대한 최종 검토로 되어있다. 최종보고서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보고서는 환경문제를 강조한 점에서 지난 '87년 레이전대통령 보고서인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보고서와는 많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공청회결과는 1)에너지 효율향상 2)에너지의 안정공급 3)환경보호 4)과학, 교육 및 기술이전의 기반정비의 4대분야로 요약된다. 이러한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1)장기저유가 지속 2)자유시장정책등이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의회표결을 앞둔 대기정화법 개정안, 석유, 가스생산 세제인센티브, 에너지절약 및 신, 재생에너지 개발추진등)

이 중간보고서에서는 공급안정과 환경의 균형이 중시되고 있다. 사실 화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안정과 환경보호간의 적정균형 유지가 '90년대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에너지와 연계시킨 것은 '87년의 에너지 안보 보고서와 크게 대비된다. 환경보호를 전제로 한 에너지공급의 대안으로서 1)R&D 투자확대 2)석유, 가스 생산 세제감면 3)원전건설 및 가동허가 간소화 3) 핵융합로 개발등이 강조되고 있다.

지구온실효과에 관련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였다. 의견차를 여하히 조정하느냐가 에너지 전략수립의 큰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에 대해서는 원전폐기물의 처리가 정치문제화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서 PA(Public Acceptance)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초과학, 교육, 기술이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금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점과 장기보다는 단기사업을 선호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지적되었다. CCT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때문에 성공적인 결실을 보고있으나, 신, 재생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취급을 받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대안으로 합작연구사업의 추진, 공립학교 과학교사의 육성등이 제시되었다.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자유시장원리를 지키되 제한적 정부지원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 발전부문에서는 정책수단은 생산성향상을 전제로 에너지효율향상, 연료사용 신축성이라는 목표와 발전의 낭비적요소 제거, 자원재순환 촉진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이루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절약기술 개발에는 자본비용이 큰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고 특히 신, 재생에너지의 경우 투자회임기간이 길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미국국가에너지 전략의 수립이 본격적인 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곧바로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DOE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그실시에는 많은장애가 남아있다. 특히 백악관의 압력과 연방정부예산부족이 큰 제약요인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보수집단계로 만족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자료분석과 정책대안 평가 및 선정단계에서 많은 수정과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동향 제60)